

2011년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회의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 2011년 5월 12일(목)~13일(금) 당지에서 OECD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 제 114차 회의가 개최되어 완만한 회복세 하에서의 고용창출, 전반적 정책조합과 국제적 파급효과, 구조정책과 자본유입, 아시아·유럽·미국 등 지역별 전망 및 정책 이슈 등을 논의한 바, 주요 회의결과를0 보고함(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김현영 사무관, 한국은행 이상우 조사국장, 우병렬 1등 서기관, 서원석 1등 서기관 등 참석)

II. 회의 주요내용

1. 완만한 회복세 하에서의 고용 창출

- 세계경제는 완만하지만 경제회복세가 고르게 나타나는(broad-based growth) 가운데, 실업자들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장기적 안목의 구조 개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언급
 - 위기 이후 추진된 단기적 고용 대책을 정상화하되, 사회 보장, 사회 보험 등의 정책은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 상황이 양호한 경우 일시적 연장을 고려(스위스, 벨기에)
 - 청년 고용 뿐만 아니라, 노약자,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 고용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구조개혁이 필요(노르웨이, OECD)
 -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One size doesn't fit for all)
- 회원국들은 고용보호제도의 완화가 고실업률 지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일한 정책은 아닐 수 있음을 강조

2.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 세계경제는 지난해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시현

○ 경기회복세 강화, 금융시장 안정, 고용여건 개선 등 (+)요인도 있으나, 일부 국가들의 재정여건 악화,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 상승 등 하방 위험도 상존하는 등 세계경제 전망에는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

□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 회원국의 공감대 형성

○ 선진국의 경우 재정건전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되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의 감소와 단기적인 경제성장 위축소지 간의 균형을 맞추고, 통화정책은 재정건전화 속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영국)

○ 아국 대표는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물가불안 공급측면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도 ①신흥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②선진국의 통화완화 기조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요측면 충격의 성격을 지니며, 경기회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인플레이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독일 대표 및 EDRC 의장(William White)도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과잉으로 상품 가격 상승, 버블 유발 등이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적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한편 ECB는 유럽과 미국과의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물가 상황 등 양국의 경제여건, 정책 목표 등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설명

□ 각국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

○ 특히 근로 유인 및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복지제도 개혁 및 연금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영국)

3. 주요국 경제 전망 및 정책 과제

가. 미국 경제

- 미국 대표는 유가 상승 등으로 금년 1/4분기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7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더블딥 우려는 낮다고 평가
 - 그러나, 주택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음(-)의 부의 효과로 가계 대차대차표 개선이 미흡
 - 또한 고용 여건의 개선도 부진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실업률이 8% 후반대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자연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12년까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어려울 전망(캐나다, 미국 등)
-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각국의 평가가 엇갈림
 - 미국 대표는 양적 완화 정책이 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통화 정책 기조 변화에는 신중해야 함을 지적. 캐나다 대표도 아직 디플레 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통화 정책 정상화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
 - 반면, EDRC 의장은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자산 버블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최근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이 미비하며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 부족하다고 지적이 다수 제기
 - 미국 대표는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군사지출 등 단기적 요인에도 기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아직 재정건전화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 대답

나. 유로 경제의 전망 및 정책 과제

-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인 유로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캐나다)
 -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 및 부채 규모에 따른 재정 위기와 전염가능성, 은행 부문의 취약성 때문에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로 파급될 가능성, 중심국과 주변국 간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우려 제기
 -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구제금융 방식에 따른 2013년 이후

민간 부문의 손실분담 가능성 등이 재정 및 금융 부문 안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구제금융 프로그램(포르투갈),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행 가능성(아일랜드), 세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시행(그리스) 등을 설명
- 새로운 감독 및 민간의 손실부담 체계의 도입, 아일랜드 은행 부문의 부채 제조정의 필요성, 재정위기 관련 대안 모색(Plan B)의 필요성 등이 지적

다. 일본 경제의 전망 및 정책 과제

- 완만한 회복을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진 및 쓰나미의 여파로 생산 및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진 복구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
- 아국 대표는 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과 정부의 차분한 대응에 대하여 격려하는 한편, 향후 공급망 정상화와 회복의 속도가 전력 부족 문제 및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안정화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원전 방사능 유출 문제에 대한 실태 공개 및 정보 공유 확대 등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
 - 일본 대표는 원전 사태의 안정화에 6~9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며,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함에 동의
- 공급 측면에서 기간시설 훼손, supply chain 붕괴, 전력 부족 사태, 원전 문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이탈리아)
 - 일본 대표는 여름 피크 시간대에 전력 부족이 우려되나 민간 기업의 업무시간 조정 등 수요관리 및 화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
- 수요 측면에서 자숙 분위기,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 및 소비 심리지표의 위축 등이 우려(이탈리아, 독일)
- 각국은 피해 복구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조합을 논의

- 아국 대표는 상당기간 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이 불가피함을 언급하고, 재건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철회, 현재 낮은 수준(5%)인 소비세 인상, 사회복지지출 감축 등을 권고
 - 특히,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이루어질 경우, 미래조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감소하고 현재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음을 지적(Recardian Equivalence)하였으며, 이에 대해 OECD 사무총장, 영국 대표 등이 공감 표시
- 일본 대표는 세금 인상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
- 디플레이션 지속 전망 및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본은행 대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여건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

라. 신흥국 경제의 전망 및 정책 과제

- 신흥국 경제는 내수 회복, 수출 증대 등에 따른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국제상품가격, 선진국의 취약한 재정 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할 전망
- 각국은 주요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 위험과 이에 대한 적절한 통화정책 대응에 대해 논의
 - 2010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신용팽창(credit bubble)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인플레이션은 긴축 정책 등의 안정 요인이 있으나, 글로벌 과잉유동성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아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정책 금리를 4차례 조정하고 미시적 물

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등 물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

- 5월 금통위에서의 정책 금리 동결에 대한 미국 대표의 질문에 대해 우리 대표는 저축 은행 부실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경기회복 속도 및 물가 상황을 고려한 금리 정상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
 -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등으로 작년 이후 5~6% 절상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의 단기 외채 증가 문제에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
 - 부(-)의 실질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문의 물가 충격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금리가 (-)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채에 대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으로 국채 금리가 낮은데 주로 기인(Greenspan's conundrum과 유사)하며, 여타 회사채 금리는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어 전반적으로는 실질금리가 (+)라고 설명
 -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어 인플레이 압력을 높이고, 신흥국 인플레이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선진국 인플레이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EDRC 의장)
- 회원국들은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논의
-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이 필요(인도네시아, 멕시코)
 - 구조개혁이 자본유출입 이슈에 긍정적인 미칠 것(뉴질랜드, 영국)
- (기타) 선진국들이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을 너무 늦게 인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신흥국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영국)

4. 구조정책과 자본흐름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하였던 자본이동은 부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규모는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이동이 주를 이룸
 - 금융 세계화는 충격의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른 거시경제 운용 제약, 신용 붐 및 자산가격 버블 형성, 외환위기 등의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의 취약성과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음
 - 자본계정 개방 및 금융시장 자유화, 자본유입의 구성 변화 등의 구조개혁은 자본유입에 따른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나, 구조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는 아직 불분명
- 자본 유입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아국 대표는 개별 국가의 환경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97년 및 2008 위기시 자본유입의 변동성이 크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였음을 설명
 - 이태리 대표는 정책 대응 시 유입되는 자본의 성격, 지속적/일시적인지 여부, 재정 상황 등의 고려를 강조
 - 각국 대표는 구조개혁에 trade-off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논의. 특히 거시 정책 제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주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하며, timing mismatch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아국 대표는 자본유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국 차원의 대응 뿐 아니라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필요하며, 최근 IMF Spillover report를 통한 각국 정책감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자본유출입 관련 정책 재검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특히 OECD는 현재 우리나라가 새로 도입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자본자유화 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인 바, 자본유출입 문제에 대한 G-20 및 IMF 등에서의 논의 상황이 OECD에서의 논의에도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 이에 대해 Padoan OECD 사무부총장은 그간의 정책 교훈, 아국 대표의 지

적 등이 고려되어 현재 자본자유화 규약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